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8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노후 인쇄기기 유입 심각

폐기처분해야 할 고물 인쇄기가 국내에 유입돼 인쇄품질의 저하와 시장 질서 확립에 지장을 불러일으켰던 기사를 소개한다.

1974년 8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고철화된 낡은 인쇄기들이 일본으로부터 계속 흘러들어와 기술향상과 거래질서 확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재일교포 재산반입 형식으로 도입되고 있는 이들 인쇄기계들은 일본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노후시설이 대부분인데 이를 현지에서 고철값이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구입, 이들 기기들이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된 기기 수량만 해도 1969년 이후 해마다 50여대씩 국내에 들어와 모두 3백여 대에 이르고 있으며 상당수가 국내도입을 준비중에 있다고 시보는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경로를 밟아 도입된 노후기계들이 시중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상공부 당국의 수입허가까지 얻은 것들이라는 것.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들 폐기처분단계에 이른 노후시설의 무모한 도입은 ①기술향상저해 ②업자끼리의 경쟁격화 ③국산기기개발저해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금융실명제 인쇄계도 큰 파급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쇄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993년 8월 27일자 인쇄신문은 동년 동월 13일부터 실시된 금융실명제로 인해 90% 정도가 10인 이하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쇄업계가 당분간 자금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쇄신문은 기사를 통해 경기침체와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으로 인쇄물

량이 줄고 수출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때에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됨으로써 부도위기는 물론 불경기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긴급자금지원을 위한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는 있지만 갑작스런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사채시장도 한냉기류를 타게 되면서 영세중소기업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담보부족 등으로 인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중 40% 이상이 사채 시장에 의존해 왔었기 때문. 인쇄신문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1,2차 지원금이 모두 6천2백억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자금사정을 크게 덜어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인쇄신문은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업체들의 도산을 방지해 주기 위해 건설여유를 재할인해 주는 한편, 무역업계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제2금융권의 무역어음 편입의무 비율을 높이고 특별무역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해주는 등의 특별배려를 해 줄 계획인 만큼 영세사업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인쇄업계에도 별도의 금융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얇은 종이 구하기 너무 어려워'

1977년 8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국내 인쇄용지 제조사들이 원가 비용이 높은 얇은 종이류의 생산을 기피함에 따라 하후기임에도 불구하고 품귀난이 계속돼 실수요자인 인쇄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당시 지물상가에 의하면 이들 제조사들은 70g 이하의 백상지, 아트지, 종질지의 생산을 거의 중단, 실수요자로부터 주문을 제대로 받지 않아 수급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적기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지종을 바꾸는 등 많은 애를 먹었으며 55g 미색백상



지 등은 정가보다 훨씬 높은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그나마도 물건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시보는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물상가에서는 고시가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메이커들이 고의로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제조사측은 수출물량확보로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며 서로 다른 시각차이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당시 백상지 60g짜리는 연당공장도 가격이 7440원, 70g은 9070원이었으며 중질지60g은 6500원, 70g은 7600원이었다.

● 인쇄사에 지나친 규제 말아야

1978년 8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신규 인쇄소 설치 및 합병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 위해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문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연합회는 건의문을 통해 인쇄산업은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공급하는 수주산업이며 그 인쇄물은 다양한 수요자가 업무수행상 또는 일상생활상 수시로 사용하는 필수품으로서 그 공급이 신속용이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생산활동과 시민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쇄과정은 수요자와 인쇄소가 원고수교와 교정 등 긴밀하게 연락이 취해져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회는 인쇄업은 그렇게 큰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이 아니며 공해로 지목되는 소음이나 진동도 자체에서 예방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시민생활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우리나라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쇄물의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인쇄소의 설치를 허가하여 주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인쇄소의 증축도 허용되지 않아 인쇄물수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방침에 의하여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개별 인쇄소가 각자의 기존 인쇄소를 폐쇄하고 합병한 새로운 인쇄소를 설치하려고 해도 이를 허가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건의문은 인쇄산업이 시설을 보완하여 국가산업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인쇄기술발전에 주력하여 인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공헌할 수 있도록 기존 인쇄소의 증축 또는 이전 및 합병 신설을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망했다.

● 관납인쇄료 너무 저렴

1980년 8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중소기업관납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조달물품의 관납대금 우선지급, 비수기비축물량확대 등 일련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건의하기 위해 열렸던 실무협의회 소식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동년 7월 11일 인쇄 등 11개 중소기업협동조합대표단은 조달청관계관과의 실무협의회에서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중소기업제품의 투매현상이 일고 있다고 주장, 비수요기에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비축을 확대하여 자금난을 완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인쇄연합회의 경우 조달청 책정인쇄물관납가격이 관수용 인쇄물요율에 의한 단가보다 32~54%나 저렴, 채산성악화로 관납기피가 불가피한 점을 내세워 가격산정의 재량권을 각 시도 지방청에 위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그때까지 실시되지 못했던 인쇄용지의 관납계약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각 조합별로 애로사항 및 요망사항을 건의했는데 조달청은 업계의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상반기 실적을 검토, 선급금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을 작업중이라고 시보는 전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